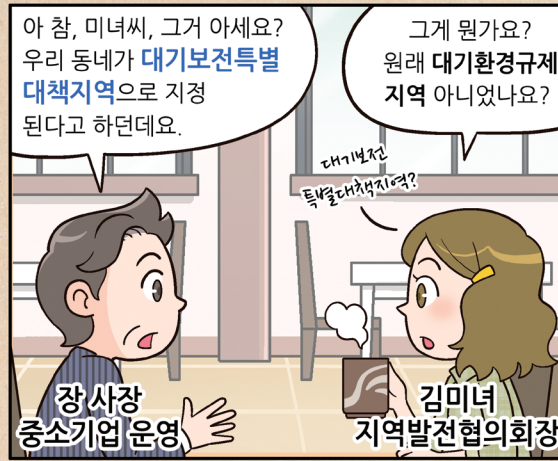


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배출원 관리제도 소개



글/그림 장통



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좀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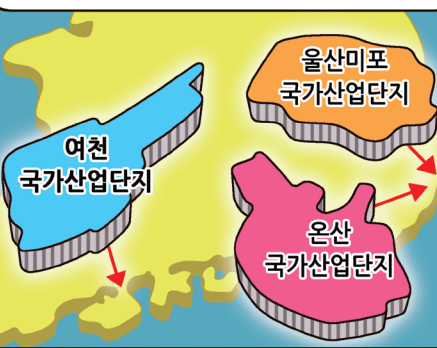


특별대책지역 지정

특별종합대책 수립

기존사업장 :
엄격 배출허용 기준 적용
신규사업장 :
특별 배출허용기준 적용
배출오염물질 총량관리
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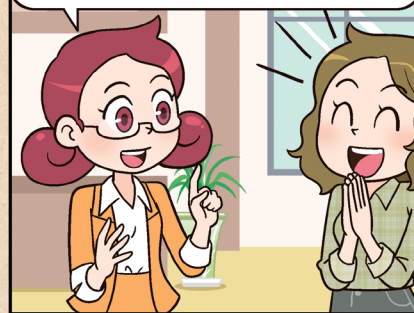
현재 시행지역은 울산·미포, 온산국가산업단지,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 단지가 있어요.



특별대책지역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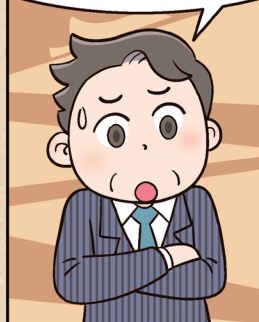
주거지역의 청정 생활권 확보와 함께 오염물질 총량관리로 비교적 단기간에 대기 질 개선이 가능합니다. 또 특정 대기 유해물질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죠.^^



지역 내 삶의 질이 향상 되겠네요!



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선 불리한 것 아닌가요? 규제만 더 심해질 것 같은데...



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내 토지 이용, 시설입지, 사업 확장 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

그러나 제도를 잘 지켜만준다면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총량관리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과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 경감 지원도 가능해집니다.



음~ 규제를 잘 활용하면 기업이미지 개선과 함께 정부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!



그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통한 관리겠군요. ^^



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, 개선목표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

	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	대기환경규제지역
법령/의무/조치역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• 환경오염·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• 환경부 주도(환경부장관) • 산업단지 위주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•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• 지자체 주도(시/도지사) • 산업단지 및 교통 등 종합적 관리
대책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종합대책 수립 • 엄격(기존사업장)·특별(신규사업장) 배출허용기준 적용 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 설치 • 배출오염물질 총량관리 •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 • 지정 후 2년 이내 실천계획 고시 • 실천계획 고시 후 10년 이내 달성 목표 • 우선 오염물질 관리 위주
전제 시행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울산·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• 전남여수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도권역(서울, 인천, 경기도) • 부산권역(부산, 김해) • 대구권역 • 광양만권역 (경남하동, 전남광양·순천·여수)

	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	대기환경규제지역
지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경부 주체의 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 수립 이행 • 지정·고시한 날부터 시행하여 대기질 개선 단기 효과 기대 •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대응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기오염 발생원 종합적 관리 가능 • 국제적 환경규제와 개발기술에 선제적 대응가능 •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
간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체 타지역 유출 우려 • 강화된 규제로 지역경제 위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자체 주체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실천 계획 수립·이행 의무 발생 • 지정·고시 후 절차에 따라 대기질 개선 지체 예상(2년 이내) • 대기오염물질 중 특정물질 우선관리로 통합관리 어려움
시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 청정 생활권 확보 • 오염물질 총량관리로 단기간 대기질 개선 가능 • 특정대기유해물질 노출 감소 • 산업단지만 규제하므로 시민 자율성 보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심지·생활권 대기질 개선 기대 •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• 환경유해기업 교외 지역 이주 유도 • 자영업자(세탁소, 주유소 등)에 대한 규제 발생
간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단지 위주 관리로 도심지·생활권 대기질 관리 미흡 • 배출오염원으로서 지역이미지 고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과 승용차 요일제 확대 등 생활 불편 초래 • 대기질의 단기적 개선 효과 기대 어려움 •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• 지역 전체 규제로 시민 자율성 침해 우려
장점 +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 • 총량관리로 인한 인센티브 (부과금 면제, 재정 지원 등) • 중소기업업체의 추가 경비 부담 경감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내 토지이용 및 시설입지 규제 없음 • 배출초과부담금 부담 없음 • 자동측정기, 오염방지·저감 시설 설치, 사업장 이전 관련 지자체 지원 확대
배출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내 토지이용, 시설입지, 사업확장 제한 • 신·증설 투자 위축으로 경기대응 어려움 • 산업단지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/유치 제약 • 자동측정기/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로 환경투자 비용 상승 우려 • 총량규제로 인한 사업 확장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·증설 투자 위축으로 경기대응 어려움 • 경제성장 둔화, 지역 경제력 감소 • 2종 이상 배출허용기준 강화 ※ 필요에 따라 중·소규모 업체에 대한 행정 규제 도심지 주요 사업장 외곽 이전 불가피